
정책참고자료

2018-1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 행안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일환 지자체 관리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

4

2 국민권익위원회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충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피해대책 마련 -

11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신설·운영 효율화 -

13

4 교육부

장애학생의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

-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

1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지역 R&D 혁신자원 활용을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부산지역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10.12) -

21

6 문화체육관광부

비무장지대,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발족,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13개 지자체 참여 -

25

7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위반 악덕업자 483개소 적발 !

- 농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표시 292개소 형사입건 -

30

8 환경부

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72.4% “시민실천운동 참여”..시민참여 의지 높아	35
---	----

9 고용노동부

‘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44
- 올해보다 93억원 증액, 약 1,100여 개 건설현장 추가지원 기대 -	

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지원해 드립니다.	47
-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의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	

11 국토교통부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5% 감소	53
- 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 이상 감소·보행자 사망사고 9.5% 감소 -	

12 해양수산부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유통 행위 집중 단속한다	58
- 해수부, 가을철 성어기 앞두고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단속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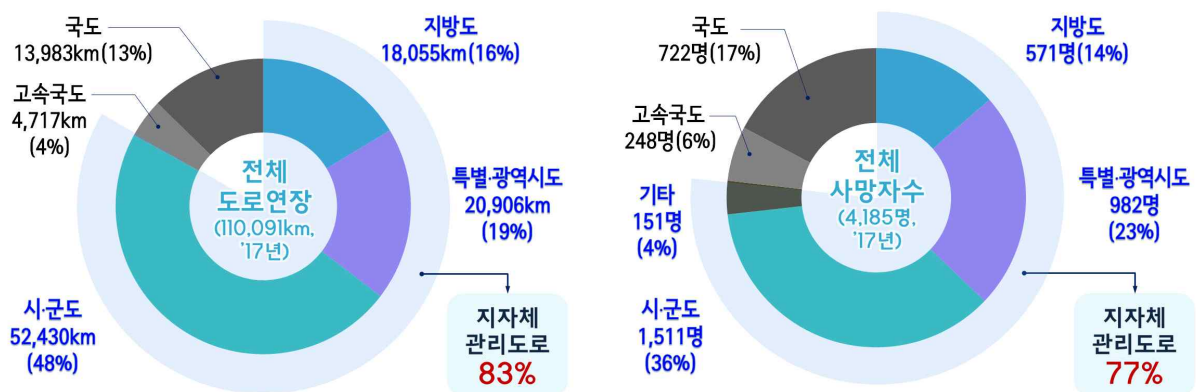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 행안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일환 지자체 관리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지역 생활권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 2017년 기준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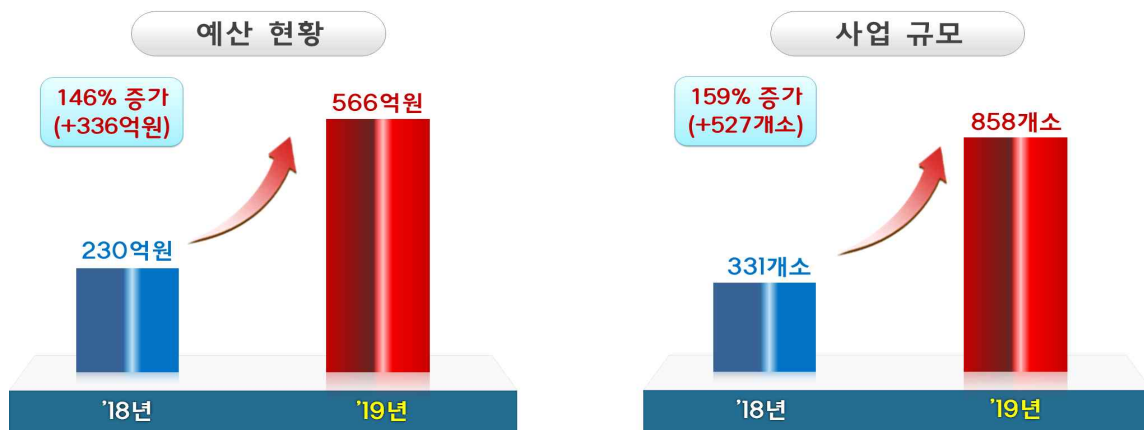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83%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며,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7%가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개선이 시급하다.



-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행안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 올해 대비 2.5배 수준인 총 566억 원의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대상 지역도 올해 331개소에서 858개소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40개소)

** 보행 친화적 노면포장, 안전표지 설치 확대(27개소)

○ 보호구역으로 미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추가 지정하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351개소) 한다.

○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351개소) 하고 신호기가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로 전환(71개소) 된다.

* (특별·광역시 지역) 연간 5건 이상 발생, (도 지역) 3건 이상 발생

○ 또한, 주택가·상가 등 보행양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은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

도록 구역 단위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18개

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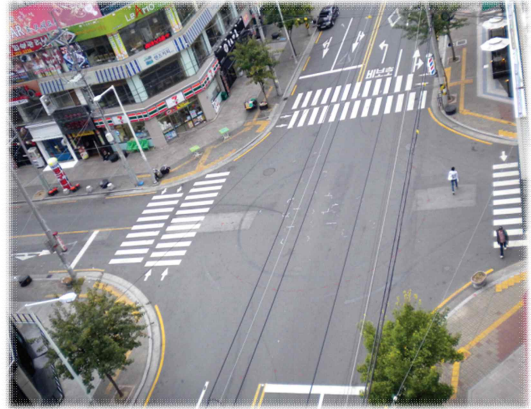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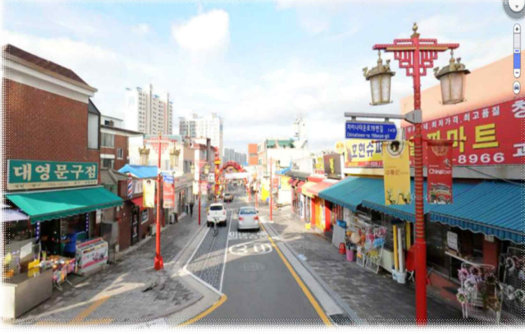
- 그동안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시행 전 1,737건에서 시행 후 1,197건으로 3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분석 / '15년 완료 사업에 대한 시행 전 3년('12~'14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시행 후 1년('16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9월 19일 지자체,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교통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정부의 주요 교통안전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정부의 교통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주요 사례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부산 연제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이설 교통섬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대구 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경기 용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인천 중구)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대상)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왕래가 잦은 시설 주변
- (사업내용)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교통안전표지(속도제한 등), 노면 표시, 일방통행 지정,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보도 등 설치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 (사업대상)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 중 보행량이 많은 구간
- (사업내용)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대신 보행 친화적 포장기법을 활용하여 도로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조성, 차량 속도 제한 및 안전표지 등 설치



참고 3

도로 종류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도로현황) 전체 110,091km 중 지방도 이하 도로가 91,391km (83.0%)
- (사고발생현황)
 - 전체 교통사고 216,335건 중 지방도 이하 구간에서 194,670건 발생 (90.0%)
 - 전체 사망자수 4,185명 중 지방도 이하 구간에서 3,215명 발생 (76.8%)

(2017. 12월 기준)

구분		전국 도로현황 ^{주1)}		교통사고 현황 ^{주2)}			
		도로연장 (km)	비율	사고건수 (건)	비율	사망자수 (명)	비율
계		110,091	100%	216,335	100%	4,185	100%
국도	소계	18,700	17.0%	21,665	10.0%	970	23.2%
	고속국도	4,717	4.3%	4,146	1.9%	248	5.9%
	일반국도	13,983	12.7%	17,519	8.1%	722	17.3%
지방도 이하	소계	91,391	83.0%	194,670	90.0%	3,215	76.8%
	지방도	18,055	16.4%	16,772	7.8%	571	13.6%
	특별·광역시도	20,906	19.0%	88,231	40.8%	982	23.5%
	시도	29,441	26.7%	74,081	34.2%	1,210	28.9%
	군도	22,989	20.9%	8,425	3.9%	301	7.2%
	기타 ^{주3)}			7,161	3.3%	151	3.6%

※ 주1) 자료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 도로현황시스템(국토교통부, '17년 12월 기준)

주2) 자료출처 : 2018년판(2017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도로교통공단)

주3) 기타

- (도로현황) 도로법에 따른 도로등급별 현황으로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 도시계획도로 등은 제외
- (교통사고 현황)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포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8. 9. 19.(수) 14:00~17:00 / 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참석인원) 행안부, 시·도 및 시·군·구,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200여명
- (주요내용) 행안부 교통안전정책 설명, 지자체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 시간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13:30~14:00 (30')	• 참가자 등록	안내 : 행안부, 손보협회
14:00~14:01 (01')	• 국민의례	
14:01~14:05 (04')	• 인사말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4:05~14:25 (20')	• 행안부 교통안전정책 설명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한 지역교통안전 개선방안	행안부 안전개선과장
14:25~15:30 (65')	• 전문가 주제 발표	
	- (발표 1) 지자체 교통안전관리 강화방안	한상진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 (발표 2)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방안, 지자체 보행안전정책 평가방안	오성훈 본부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발표 3)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최대근 경정 (경찰청 교통운영과)
15:30~15:40 (10')	지휴식	
15:40~16:40 (60')	•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발표 1) 서울시 교통안전정책	강진동 과장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 (발표 2)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송권춘 과장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 (발표 3) 원주시 회전교차로 활성화 계획	이길복 팀장 (원주시 교통행정과)
	- (발표 4) 부천시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	김경희 팀장 (부천시 교통사업과)
16:40~17:00 (20')	지종합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폐회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충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피해대책 마련 -

- 강원도 강릉시에 건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수해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강원도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근 마을의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해예방대책 마련 및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송전선로 지중화는 땅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땅 속에 묻는 방식

- 강릉시 인근에 건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삼성물산이 한국남동발전, 강릉석탄화력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강릉에코파워(주)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유연탄화력발전소 재검토 정책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다시 결정하면서 강릉에코파워(주)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지역이 2002년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면서 5명의 주민이 사망한 곳이므로 발전소 부지에

흙쌓기 공사를 하지 말 것과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4일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강릉시 부시장, 강릉에코파워(주)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강릉에코파워(주)는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마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내 배수관로 개보수, 빗물펌프장 등 빗물 집·배수시설 설치, 군선강변 정비, 홍수경보시스템 설치, 군선강 방류수 흐름 개선을 위한 하류부분 선형 조정 등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1.6km 구간은 땅 속에 묻기로 했으며, 수해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창업, 첫걸음기업 판로 개척,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신설 · 운영 효율화 -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금)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첫걸음기업 :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

* 소액과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2천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는 과제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

-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

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었으며,

* 소액과제 참여대상 제품 :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 기술개발제품 추가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 (예) ‘18년 9월 A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D제품을 구매하면, ’19년 9월까지

A기관 뿐만 아니라 B, C기관이 D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

원센터, 한국산학연합회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라면서,

-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 · 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 를 통해 10월 5일(금)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 시범구매 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합회 판로지원팀
(042-720-3371~3)

-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 공공기관 시범구매제도 참여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6)

장애학생의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

-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주관하는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가 ‘내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주제로, 10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국립 태권도원(전북 무주)에서 열린다.
- 1968년에 시작되어 올해 47회를 맞은 이 대회는 그동안 장애 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대국민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직업기능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목적으로 감각·지체장애(시각·청각·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지적·정서·행동, 자폐성장애) 영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개최된다.
-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감각·지체장애학생 223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문화공연 등에 참여하면서 우정과 화합을 다지게 된다.
- 또한, 공예품 만들기, 가상현실(VR)체험존, 캘리그래피*,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뜻함

** 꽃이나 나무 등 식물에 유래하는 방향 성분을 이용하고, 심신의 건강이나 미용을 증진하는 기술 혹은 행위를 말함

□ 이번 대회는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하여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4개 분과에 총 13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 청각장애 분과는 시각디자인 등 3종목, 시각장애 분과는 점역교정, 음악 등 4종목, 지체장애 분과는 한지공예, 과학상자 조립 등 6종목으로 장애유형·특성에 따른 직업교육과정 및 취업이 용이한 종목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갖고앉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 분과별 대회종목

- ▶ (청각장애) 제과·제빵, 시각디자인, 커피바리스타
- ▶ (시각장애) 점역교정, 음악, 워드프로세서(전맹), 워드프로세서(저시력)
- ▶ (지체장애/특수학교) 한지공예, 사무용품 조립, 스티커 붙이기
- ▶ (지체장애/특수학급) 냅킨아트, 과학상자 조립, 사무행정

- 특히, 올해는 대회 종목이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장애인 취업 동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종목*과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 변경된 종목 내용

2016년 감각·지체장애 영역 종목	2018년 신설·변경된 종목
(청각) 컴퓨터조립 (시각) 컴퓨터활용능력 (지체/특수학급) 십자수	(청각) 커피바리스타 (시각) 워드프로세서 (지체/특수학급) 냅킨아트

- 참가 학생 전원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하며, 대상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 금상 13명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게는 대회장상이 주어진다.

□ 교육부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학생들의

전문 직업기능 역량이 향상되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비장애 차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계획

※ 2018년도 대회는 직업체험부스 운영을 포함하여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로 추진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목적 : 장애학생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 주최/주관 : 교육부 / 전라북도교육청
- 대회슬로건 : 내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
- 행사기간 : 2018. 10. 4.(목) ~ 10. 5.(금), 1박 2일
- 행사장소 : 국립태권도원(전북 무주)
- 대회규모 : 1,000여 명
 - 장애학생 및 인솔교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 대회종목 : 감각·지체장애 분과별 3~4종목씩 총 13종목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수학급
종목	점역교정, 음악, 워드프로세서(전맹) 워드프로세서(저시력)	제과.제빵, 시각디자인, 커피바리스타	한지공예, 사무용품조립, 스티커붙이기	냅킨아트, 과학상자조립, 사무행정
참가인원(223)	53명	47명	82명	41명

※ 음영은 2018년 신설된 종목

※ 발달장애(지적·정서·자폐성장애) 영역과 감각·지체장애(시각·청각·지체장애) 영역 격년 개최

□ 행사 일정

- 개회식 및 축하공연
 - 일시 : 2018. 10. 4.(목) 14:00~16:20
 - 장소 : 국립태권도원(전라북도 무주군)

순서	시간	시량	내용
식전 행사	14:00~14:30	30분	전북맹아학교 대취타, 태권도시범 등
개 회 식	14:30~15:10	40분	축사, 선수 선서 등
식후 공연	15:20~16:20	60분	축하 공연 등

○ 직업기능경진대회

- 일시 : 2018. 10. 5.(금) 09:00~13:00

- 장소 : 국립태권도원 도약센터 및 T1경기장 일대

구분	시간	시량	행사 내용
대회장 입실	08:30 ~ 08:50	20분	입실, 물품 확인 후 인솔교사 퇴실
대회 운영	08:50 ~ 09:00	10분	대회 안내
	09:00 ~ 12:30	210분	대회 진행
직업 체험	12:00 ~ 13:00	60분	진로체험부스 운영 및 체험

- 대회 종목별 참가 인원

분 과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총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종 목	제과 제빵	커피 바리스타	시각 디자인	소 계	워드 프로 세스 (전맹)	워드 프로 세스 (저시 력)	음악	점역 교정	소 계	한지 공예	사무 용품 조립	스티 커 붙이 기	소 계	냅킨 아트	과학 상자 조립	사무 행정	소 계	
인 원	8	23	16	47	10	14	14	15	53	18	27	37	82	8	12	21	41	223

□ 시상 계획

○ 참가학생 전원 시상

구분 분과	대상 [국무총리상]		금상 [교육부총리상]		은상 [대회장상]		동상 [대회장상]		장려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대회장상]	지도 교사상 [교육부 총리상]
	인 원	포상금 (30만원)	인 원	포상금 (각20만원)	인 원	포상금 (각15만원)	인 원	포상금 (각10만원)	인 원	포상금 (각7만원)	인원 (포상금 없음)	
청각장애	1	30	3	60	3	45	6	60	9	63	26	3
시각장애			4	80	4	60	8	80	12	84	25	4
지체장애Ⅰ			3	60	3	45	6	60	9	63	61	3
지체장애Ⅱ			3	60	3	45	6	60	9	63	20	3
합계	1	30	13	260	13	195	26	260	39	273	132	13

부산지역 R&D 혁신자원 활용을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부산지역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10.1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0월 12일(금) 오전 9시 부산지역 연구개발(R&D) 혁신자원의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부산 지역 소재 기업연구소 대표 및 연구개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에 걸친 「4만 기업(연) 혁신성장, 통(通)&톡(talk)」 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혁신주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기업연구소의 R&D 역량을 진단해보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 성공사례 공유를 시작으로 지역 내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혁신역량이 높고 지역 특화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혁신 주체(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혁신 요소(인재·자금·시장) 및 혁신기반(지역특화산업·클러스터)

등 혁신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더욱 중요함에 공감하였다.

- 부산지역 소재 기업 대표들은 기업 R&D 수행 시 도움이 되었던 지역 자원 활용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R&D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을 요청하였다.
-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로 LG전자 등 대기업의 제품 개발비 절약 및 개발기간 단축하는 등의 인접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되고,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유사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기획 및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연구소 현장방문을 진행한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지역 내 우수한 석·박사 고급 인력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고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의 거의 유일한 우수인재 확보 수단을 강조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감축·폐지는 기업의 R&D 역량 약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임을 호소했다.
-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부산지역 기업 R&D 경쟁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정부 R&D 투자에 있어 지역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기념,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기업 연구소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돌파구 마련

□ 행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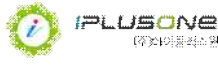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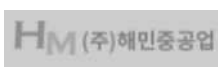
- (목적) 부산지역의 R&D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의 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업 R&D를 통한 혁신성장 방안 논의

* 지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지역내 인재·자금·시장 등 혁신요소, 지역특화 산업·지역클러스터 등 혁신기반

- (주요내용) 부산시 R&D 역량 진단, 지역 혁신자원 활용사례 공유, 지역 혁신자원 활용방안 현장의견 수렴
- (일시/장소) '18. 10. 12(금) 09:00~10:30 / (주)에코에너지 기술연구소(부산 강서)
- (참석자) 부산지역 기업대표, 부산광역시, 부경대·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지원기관 대표자 20명 내외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20 ('20)	지역 대표기업 R&D 현장방문	
09:20~09:25 ('05)	인사말씀	장관
09:25~09:30 (0'5)	부산·경남지역 R&D 역량 진단	BISTEP
09:30~09:40 ('10)	지역 혁신자원 활용 성공사례 - 지역 중소기업-대기업 협력 사례	에코에너지 기술연구소
09:40~10:30 ('50)	자유토론 :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참석자
10:30	폐회	과기정통부

기업 로고	주요 현황
	▪ (기업명) 누리생명과학원(주) ▪ (주요사업) 수질 검사, 분석 ▪ (설립일자) 2017 ▪ (대표자) 최진성
	▪ (기업명) 신세계메디텍(주) ▪ (주요사업) 치과용임플란트, 시술기구 ▪ (설립일자) 2007 ▪ (대표자) 백승관
	▪ (기업명) (주)동화엔텍 ▪ (주요사업) 선박용·플랜트용 열교환기 ▪ (설립일자) 1980 ▪ (대표자) 김동건, 홍성희
	▪ (기업명) 디케이락(주) ▪ (주요사업) 해양기자재 피팅류, 밸브류 ▪ (설립일자) 1991 ▪ (대표자) 노은식
	▪ (기업명) (주)삼화피엠아이 ▪ (주요사업) 자동차부품, 공조용부품, 원기어 ▪ (설립일자) 1996 ▪ (대표자) 박재훈
	▪ (기업명) (주)아이플러스원 ▪ (주요사업) 해양안전시설 연구 및 개발업 ▪ (설립일자) 2016 ▪ (대표자) 강철세
	▪ (기업명) (주)에너콘 ▪ (주요사업) 선박용 액츄에이터, 유압부품류 ▪ (설립일자) 2015 ▪ (대표자) 이명용
	▪ (기업명) (주)에코에너지 기술연구소 ▪ (주요사업) 에너지분야 전문연구, 시험·평가 ▪ (설립일자) 2011 ▪ (대표자) 이재근
	▪ (기업명) (주)엔젤 ▪ (주요사업) 전기녹즙기, 냉동공조기, 기어 ▪ (설립일자) 1999 ▪ (대표자) 김점두리
	▪ (기업명) (주)엘앤비기술 ▪ (주요사업) 유선통신장치, 무선방송장치 ▪ (설립일자) 2009 ▪ (대표자) 김종운
	▪ (기업명) (주)해민중공업 ▪ (주요사업) 알루미늄 선박건조, 선박부분품 ▪ (설립일자) 2016 ▪ (대표자) 오형석

비무장지대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발족,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13개 지자체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비무장지대(DMZ) 접경 13개 지자체*(광역시 3개, 기초 10개)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20일(목) 낮 12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 광역지자체 3개(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기초지자체 10개(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이번 발족식에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등이 참여해 향후 평화관광 추진 협조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추진협의회 아래에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협의회는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로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남북은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평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비무장지대 관광은 기존의 분단과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서 벗어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크게 늘어난 반면, 관광과 생태 보존의 공존을 위해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막는 등 부처와 지자체 간에 조율해야 할 사항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문체부 등 중앙부처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 논의해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태강 제2차관은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비무장지대와 접해 있는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및 강화군·옹진군·김포시·파주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하 “문체부 및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및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문체부 및 관계기관은 기존 법령에 따른 권한 및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존중하면서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 문체부 및 관계기관은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평화관광 관련 문체부 및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2. 지자체 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3. 평화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4. 비무장지대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4.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5. 그 외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필요한 정책 및 사업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문체부 및 관계기관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추진협의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약서는 문체부 및 관제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5조(협약의 준수) 문체부 및 관제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9. 20.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를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태강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

경기도를 대표하여

강원도를 대표하여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석두

김포시를 대표하여

파주시를 대표하여

김포시장
정하영

파주시장
최종환

강화군을 대표하여

옹진군을 대표하여

강화군수
유 천 호

철원군을 대표하여

철원군수
이 현 종

양구군을 대표하여

양구군수
조 인 목

인제군을 대표하여

인제군수
최 상 기

한국관광공사를 대표하여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민 경 석

용진군수
장 정 민

연천군을 대표하여

연천군수
김 광 철

화천군을 대표하여

화천군수
최 문 순

고성군을 대표하여

고성군수
이 경 일

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위반 악덕업자 483개소 적발 !**- 농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표시 292개소 형사입건 -****《 주 요 내 용 》**

◆ (단속개요) 추석 명절 유통 성수기에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18.8.27.~9.21.(26일간)

○ 단속대상: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등

○ 단속 연인원 및 조사업체 수: 5천여 명, 27천 개소

◆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83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거짓 표시 292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191개소는 과태료 부과

○ 주요 품목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225건), 배추김치(141건), 염소고기(9건), 떡류(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등

* 적발업체 수: ('17) 547개소 → ('18) 483(전년 추석대비 11.7% 감소)

○ 양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염소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실시

* 적발업체 수: ('17) 0건 → ('18.9.) 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27.부터 9.21.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7,044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 39.8%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를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산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하여 둔갑 판매 시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 최다 위반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돼지고기 시료 검정('18.8.1.~9.21.): 12점(거짓표시 7)

- 또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하였다.

□ 위반업소 증감 추세를 보면 전년대비 11.7% 감소 [(‘17) 547 → (‘18) 483] 하였으며, 이는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의무교육** 등 위반자 처벌강화 효과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과징금(‘17.6.4.부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한 자에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의무교육(‘17.5.30.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 특히, 이번 단속에는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율을 높였다.

□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

□ 단속 취약시간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18.9.16.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A축산과 B식육점은 단속 활동이 없는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A축산은 1톤을 B식육점은 0.5톤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

□ 호주산 냉장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국거리로 거짓표시 판매

- '18.9.18. 인천광역시 □구 ○○축산에서는 '16년부터 호주산 냉장 쇠고기 1,005kg을 구입하여, 국내산 한우 양지국거리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1kg당 38,000원에 판매

□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 '18.9.10. 경남 진주시 소재 ○○음식점은 업소 메뉴판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760kg 상당을 소비자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함

□ 호주산 산양을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

- '18.8.29. 경기도 광주시 소재 ○○흑염소 음식점은 호주산 산양 2,500kg을 구입하여 염소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 타 지역산(영암) 배를 “나주배” 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

- '18.9.8. 전남 영암군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 ○○○는 영암군에서 재배된 배를 수확한 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남 나주” 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15kg들이 180박스(2,700kg)를 보관 중인 현장을 적발

참고2

주식 대비 농식품 원산지 단속 실적

단속실적 총괄

연도	단속기간	단속인원	조사장소	위반업소	적발 실적		
					거짓표시	미표시	
						실적	과태료
2018년 (A)	8.27.~9.21. (24일간)	5,000명	27,044개소	483개소	292개소	191개소	46,471만원
2017년 (B)	9.6.~9.29. (24일간)	3,479명	19,672개소	547개소	343개소	204개소	45,783만원
대비(A/B)%		143.7	137.5	88.3	85.1	93.6	101.5

주요 적발 품목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계	비율
		건	건	건	%
축산물	돼지고기	99	47	146	25.8
	쇠고기	37	27	64	11.3
	닭고기	7	8	15	2.7
배추김치		112	29	141	24.9
두부류(콩)		21	33	54	9.5
쌀		8	6	14	2.5
염소고기		7	2	9	1.6
빵류		1	5	6	1.0
떡류		2	3	5	0.9
고사리		-	3	3	0.5
도라지		-	2	2	0.3
밤		1	-	1	0.2
배		1	-	1	0.2
사과		-	1	1	0.2
건강기능식품		1	-	1	0.2
기타		34	69	103	18.2
합계		331	235	566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국민 78.7% “미세먼지는 건강위협” , 72.4% “시민실천운동 참여” …시민참여 의지 높아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근 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오염도 ‘보통’ 응답자는 28.0%만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
-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발생 30.3%, 국내외·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 18.1% 순으로 답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주)케이티엠엠과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9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pm 3.0\%$ p(신뢰수준 95%)이다.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7.5%)이 알고 있으나 44.6%가 불만을 표시했다. 정책 인지도가 낮을수록 불만족 응답이 높아*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과 함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타났다.

* 대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만족 9.9%, 불만족 36.3%이나, 비인지한 경우 만족 1.4%, 불만족 57.8%로 나타남

- 국내저감·국제협력·건강보호·고농도긴급대응 등 미세먼지 저감 4대 대책분야에 대한 정책우선 순위는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협력 27.6%, 건강보호 25.9%, 국내저감·고농도긴급대응 23.2%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다.

-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1%가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의 과반수(59.2%)도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 응답률(현재 소유 차종별): 하이브리드차 76.2%, 휘발유차 73.5%, 소유차량 없음 72.9%, LPG차 70.0%, 전기·수소차 69.2%, 경유차 59.2%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이 시행된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환경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 보완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8월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 등 시행 방향과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정부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올해 7월부터 두달간 환경부와 환경재단, 한국대기환경학회가 공동 개최했던 ‘미세먼지 해결 돕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열린다.
- 공모전에는 200여 가지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김현진 씨의 ‘농촌지역 불법 소각쓰레기 문제 해결’ 등 6개 아이디어가 환경부 장관상 등을 받는다.
-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심각한 건강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려는 시민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하여 올 겨울에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91명
 - * 표본오차 : $\pm 3.0\%$ (95% 신뢰수준)
- 조사기간 : '18. 8. 31 ~ 9. 2
- 조사방법 : 모바일웹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사용
- 조사실시 및 결과분석 : (주)케이티엠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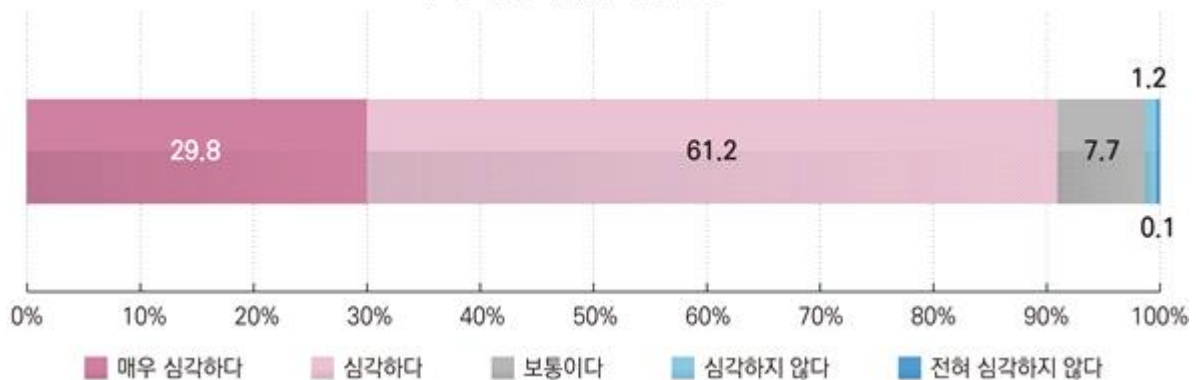
<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

○ 문제 심각성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각 정도	매우 심각함 29.8%, 심각함 61.2%, 보통 7.7%, 심각하지 않음 1.2%, 전혀 심각하지 않음 0.1%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 정도	전혀 위험이 되지 않음 1.1%, 걱정되는 수준은 아님 6.6%, 보통 13.6%, 위험이 됨 63.1%, 치명적이라고 생각함 15.6%

※ 미세먼지 오염도 '심각'(심각 또는 매우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위협 또는 치명적)고 응답한 반면, 오염도 '보통' 응답자는 28.0%만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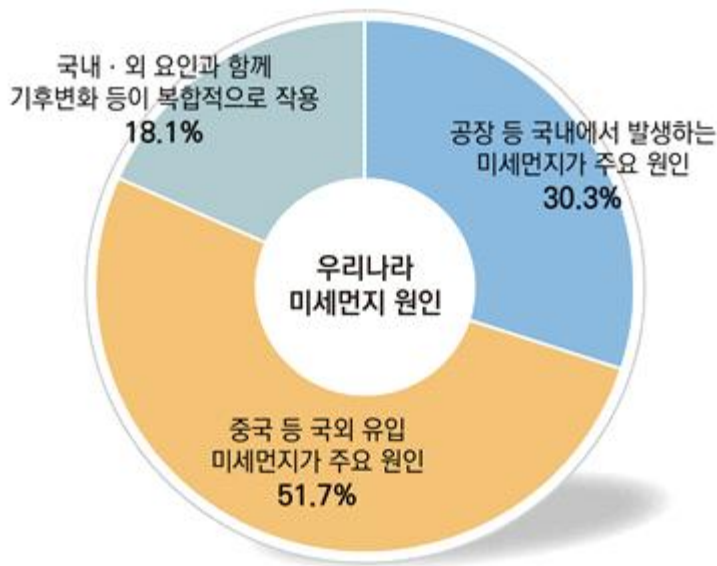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정도



○ 미세먼지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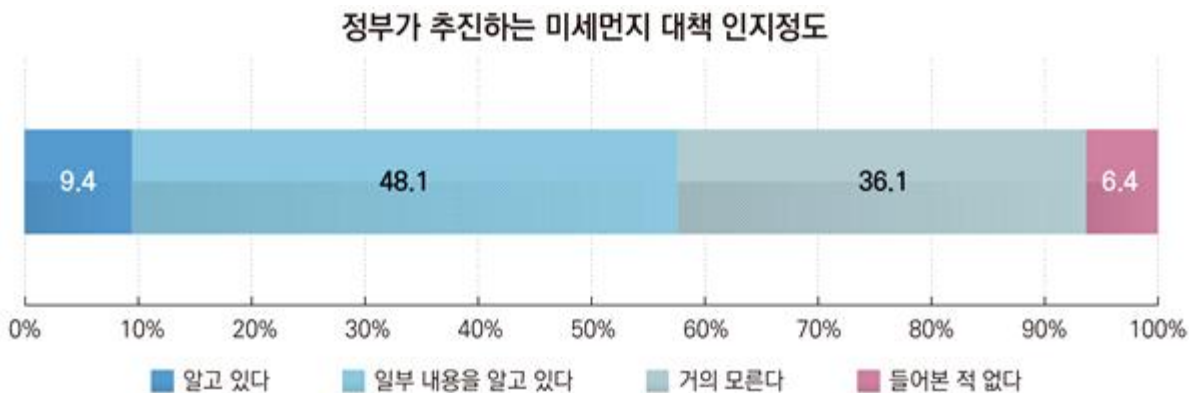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 51.7% 공장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 30.3% 국내·외 요인과 함께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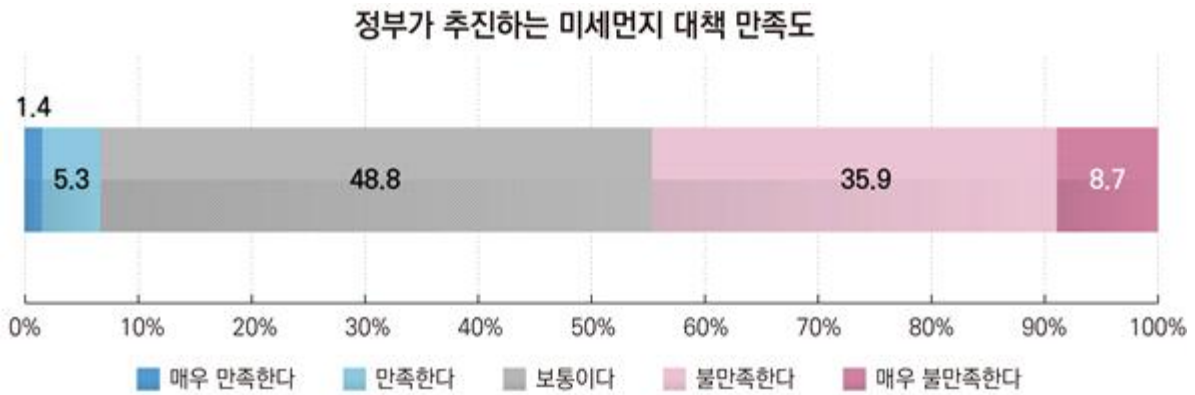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인식 >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정부 추진 미세먼지 대책 인지 정도	알고 있음 9.4%, 일부 내용을 알고 있음 48.1%, 거의 모름 36.1%, 들어본 적 없음 6.4%
정부 추진 미세먼지 대책 만족도	매우 만족 1.4%, 만족 5.3%, 보통 48.8%, 불만족 35.9%, 매우 불만족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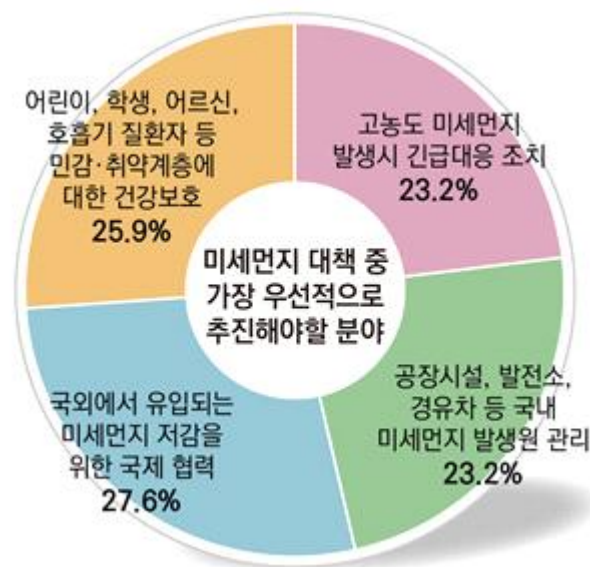




※ 정부대책 인지자(알고 있음+일부 내용 알고 있음)는 만족 9.9%, 불만족 36.3%인 반면, 비인지자는 만족 1.4%, 불만족 57.8%

○ 대책 우선순위 추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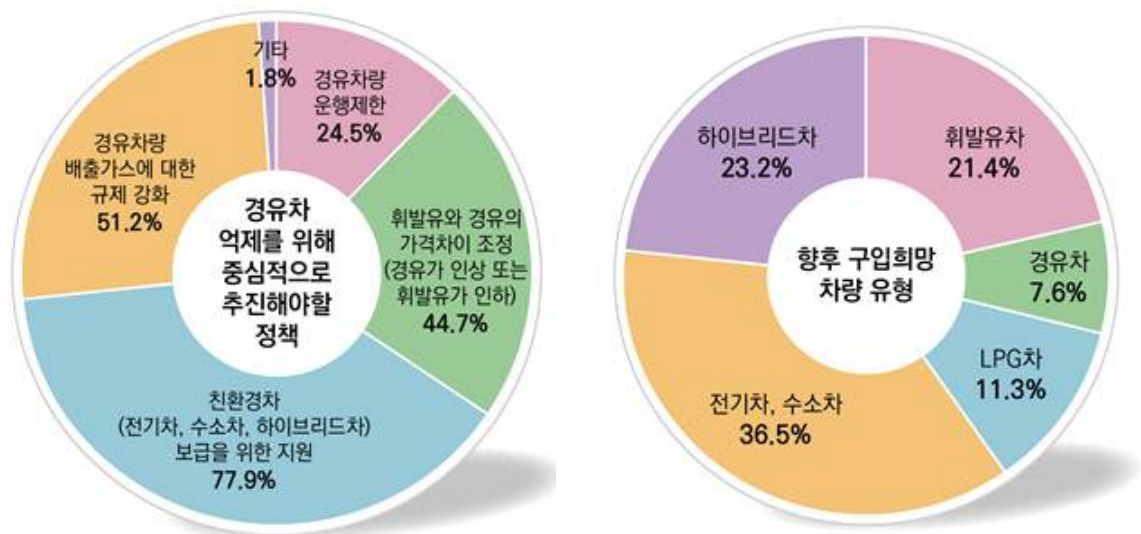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27.6% 어린이, 학생,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25.9% 공장시설,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23.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대응 조치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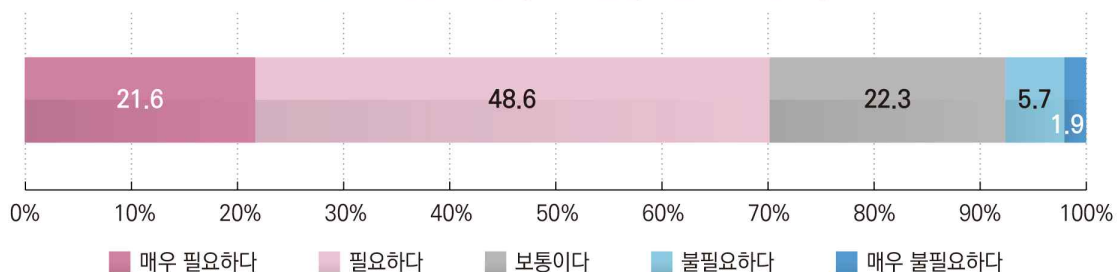
○ 경유차 관련 인식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경유차 억제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한 지원 77.9% 경유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 51.2%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이 조정(경유가 인상 또는 휘발유가 인하) 44.7% 경유차량 운행제한 24.5%, 기타 1.8%
향후 구입희망 차량 유형	전기차·수소차 36.5%, 하이브리드차 23.2%, 휘발유차 21.4%, LPG차 11.3%, 경유차 7.6%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성*	매우 필요 21.6%, 필요 48.6%, 보통 22.3, 불필요 5.7%, 매우 불필요 1.9%

* 현재 소유 차량별 경유차 운행제한 ‘필요’(매우필요 또는 필요) 응답율 : 하이브리드차 76.2, 휘발유차 73.5, 소유차량없음 72.9, LPG차 70.0, 전기차·수소차 69.2, 경유차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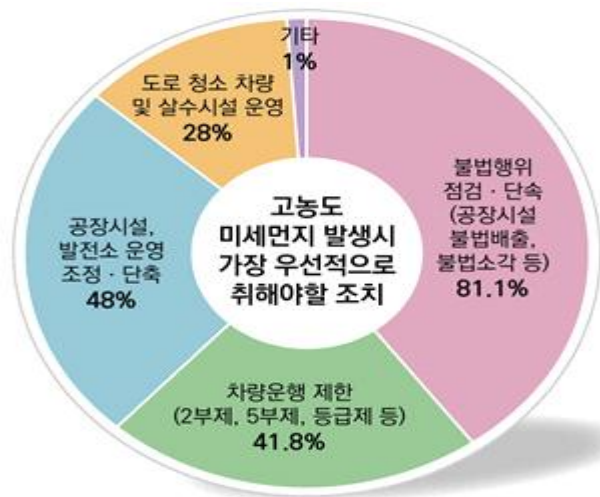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경유차 운행제한 규제 필요성



< 고농도 대책 및 시민 참여 >

○ 고농도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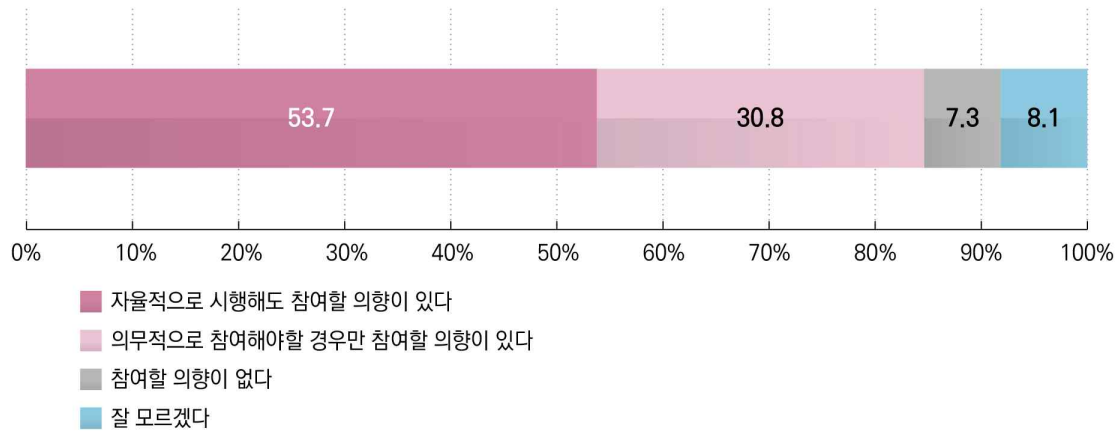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	불법행위 점검·단속(공장시설 불법배출, 불법소각 등) 81.1% 공장시설, 발전소 운영 조정·단축 48% 차량운행 제한(2부제, 5부제, 등급제 등) 41.8% 도로청소 차량 및 살수시설 운영 28%, 기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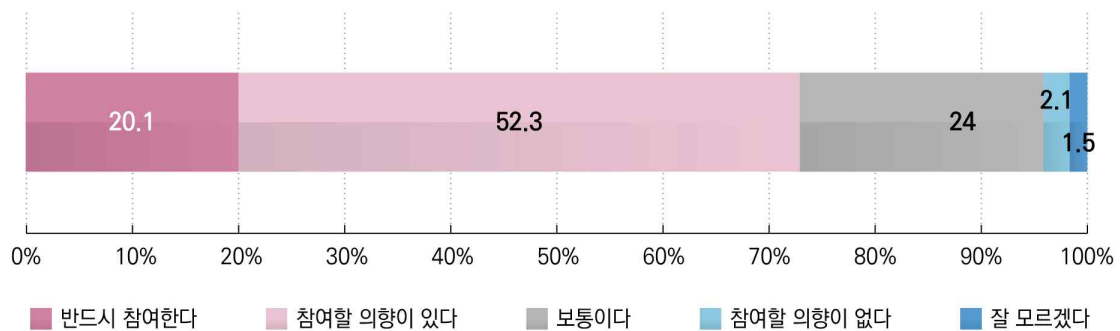
○ 시민 참여

조사 내용	조사결과 요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운행 제한 참여 의향 (2부제, 5부제, 등급제 등)	자율적으로 시행해도 참여할 의향 있음 53.7%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경우만 참여할 의향 있음 30.8% 참여할 의향 없음 7.3% 잘 모르겠음 8.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참여 의향 (대중교통이용, 에너지·자원 절약, 친환경차 구매 등)	반드시 참여 20.1%, 참여 의향 있음 52.3%, 보통 24%, 참여 의향 없음 2.1%, 잘 모르겠음 1.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운행제한 참여 의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참여 의향



‘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 올해보다 93억원 증액, 약 1,100여 개 건설현장 추가지원 기대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년 소규모(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17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다.
- 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13년 ~ ‘17년 재정지원사업 성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한 ‘13년 이후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증액(38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 연도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예산: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 ‘19년 331억원(예정)

- 이 경우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도별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사업장(개소): '17년 2,380 → '18년 2,857 → '19년 3,980(예정)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목 적

-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필요한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여 건설 재해 감소

□ 사업물량

-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 ('19년) 331억원(예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 * 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공사규모별 차등 지원

구분	3억원 미만	3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20억원 미만
지원 비율	65%	60%	50%

- *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한도)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 같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2개소 이내 현장을 지원

- (지원내용)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 안전방망 : 플라잉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 플라잉넷 및 수직보호망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 사다리형 작업발판 : 현장 당 3개 이내, 동일 사업주 당 연간 6개 이내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지원해 드립니다.

-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의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
-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사례 예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길잡이

Q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A. 1366센터는 대상자의 입소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협조합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시 1366센터는 타 시설로 연계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기관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회신합니다. 경찰은 1366센터를 통해 보호시설로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실종신고를 처리하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 보호기관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112 신고만 할 뿐, '처벌도 원치 않는다', '상담 연계도 싫다'며 도움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A 지속적인 폭력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성을 판단하여 사건 처리하는 한편, 지원기관은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알려줘야 할 한 마디) **설령 피해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

▷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 '화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님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인식시켜 주세요.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 '신고 출동 및 상담'에서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긴다.
-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원기관 :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결혼이주여성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안내

하고 있다.

- ‘긴급보호 및 입소’에서는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제작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참여하였다.
 - 앞으로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붙임】 1.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1. 미혼모·부 등 한부모 상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주세요
2.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 상담실이 없을 경우 목소리를 낮춰서 응대해주세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3.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아이 아버지, 원가족, 가정사 등)은 삼가 해 주세요.
4.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세요.
5. “안돼요, 모르겠는데요.” 보다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6.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후원물품 수령 시 등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세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 발급)
8.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족콜 1644-6621 및 미혼모부자 시설, 미혼모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9.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시·군·구별로 조례에 규정)
10. <한부모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문>를 교부해주세요.

사례별 상황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길잡이

경찰-피해자 지원기관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구분	신고 출동 및 상담
경찰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 시, 눈에 띄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가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꼼꼼히 남깁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집 밖으로 분리)하며, '화해'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처요령과 지원기관을 친절히 안내하여 지역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로 연계합니다. ※ 결혼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계 가능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하는 한편, 외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병원 진료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필요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잘못된 것처럼 추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피해자의 충분한 심리적 안정이 확인된 후 피해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피해자 상담·보호'의 주체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합니다. ▶우울장애·무기력 등의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긴급보호 및 입소
경찰	▶피해자가 시설 입소를 요청할 경우,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필요물품, 약, 돈, 계절 옷가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등 신분 관련 서류 등) ▶경찰은 지원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이름·나이, 피해정도, 자녀동반 유무, 음주상황, 복용하는 약의 유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보호시설은 폭력피해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일반 정신질환자나 부랑인 등을 연계치 않도록 유의합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접촉을 거부한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 간 대화나 만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를 유지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원기관에 가해자가 방문·접근·배회할 경우, 경찰은 법적인 조치 가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지원기관	▶폭력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특성·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필요 시 시설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제도(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를 신청·활용하여, 가해자의 추적·접근 등에 대비합니다. ※ 보호명령 신청 시 보호시설 소재지는 비공개 요청 가능(「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 제3항) ▶입소 여성·아동 대상 실종신고 접수 시 경찰은 1366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366센터에서 대상자를 타 보호시설로 연계했는지 여부 파악) ▶입소자가 귀가할 경우, 관할 경찰서(학대예방경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방안을 논의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 속, 이것이 궁금해요!



Q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A 1366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입소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협조합니다. 경찰의 협조요청 시 1366센터에서는 타 시설로 연계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기관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사실영을 기재하지 않고 회신합니다.
경찰은 1366센터를 통해 보호시설로의 연계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실종신고를 처리하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 보호기관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112신고만 할 뿐, '처벌도 원치 않는다', '상당 연계도 싫다'며 도움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A 지속적인 폭력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성을 판단하여 사건 처리하는 한편, 지원기관에서는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울리는 당신의 말 한 마디 stop!! 가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 한마디



피해자를 울리는 말 한마디

"다행 사람도 없고 문же 없어 보이는데요."

가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

"다행 곳이 없더라도, 폭언·기물파손도 가정폭력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외부로 드러난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되어 왔는지, 협박·기물파손 등 다른 폭력의 흔적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세심하게 묻고 확인해주세요.



피해자를 울리는 말 한마디

"술 때문에 화김에 그런거야, 그러도 가혹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가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

"가혹이라도 술 때문에 혹은 화김에라도 폭언·폭행하는 것은 폭력이며, 처벌 받습니다"

술, 화김, 병력 등이 폭력행사의 원인이라도 폭언·폭행·기물파손은 '가정폭력'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게 술·화김에 하는 폭력 행동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울리는 말 한마디

"바람이라도 파했나요. 왜 맞으셨나요"

가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

"술병 피해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경위를 물을 때 원인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켜 주세요.



피해자를 울리는 말 한마디

"처벌하실 생각 없으시면 신고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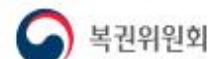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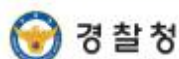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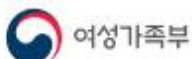
가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위험을 느낄 때마다 계속 신고하세요! 그때마다 출동하여,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행위로 '화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님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인식시켜 주세요.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출처 : 한국여성민지회(2017). #경찰이라니, 가해자인줄 채구성

모든 가정폭력 신고는 피해자의 #Me Too입니다 #With You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5% 감소

- 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 이상 감소·보행자 사망사고 9.5% 감소 -

-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감소한 2,773명이며, 특히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052명으로 보다 큰 폭(-9.5%) 감소하였다.
- 지자체별로는 광주(-40.7%),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교통안전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지자체별 사후 조치현황을 공개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2,773	222	111	87	91	51	63	61	493	142	167	267	193	250	295	228	52
17년	3,031	246	117	93	85	86	53	46	583	180	166	273	222	269	315	235	62
증 감	-258	-24	-6	-6	6	-35	10	15	-90	-38	1	-6	-29	-19	-20	-7	-10
(%)	-8.5	-9.8	-5.1	-6.5	7.1	-40.7	18.9	32.6	-15.4	-21.1	0.6	-2.2	-13.1	-7.1	-6.3	-3.0	-16.1

- 중점 관리 대상인 보행자 사고로 한정하면 광주(-42.3%), 강원

(-38.0%), 충북(-32.3%)이 30%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세종(12.8%)은 1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052	142	56	39	42	30	36	23	199	31	42	88	52	68	78	99	27
17년	1,163	134	58	40	39	52	29	22	247	50	62	78	74	86	88	79	25
증 감	-111	8	-2	-1	3	-22	7	1	-48	-19	-20	10	-22	-18	-10	20	2
(%)	-9.5	6.0	-3.4	-2.5	7.7	-42.3	24.1	4.5	-19.4	-38.0	-32.3	12.8	-29.7	-20.9	-11.4	25.3	8.0

-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26.3%)하였으나,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령자의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5.3%)하였으나, 울산(111.1%), 대전(64.7%), 충남.세종(23.8%)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28	1	1	0	3	0	1	0	12	2	0	3	0	1	3	1	0
17년	38	1	2	1	0	4	0	0	7	2	3	3	1	6	6	2	0
증 감	-10	0	-1	-1	3	-4	1	0	5	0	-3	0	-1	-5	-3	-1	0
(%)	-26.3	0.0	-50.0	-100.0	300.0	-100.0	100.0	0.0	71.4	0.0	-100.0	0.0	-100.0	-83.3	-50.0	-50.0	0.0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1,198	83	34	39	29	27	28	19	176	68	64	130	94	130	138	118	21
17년	1,265	93	52	45	26	38	17	9	210	79	68	105	115	137	149	102	20
증 감	-67	-10	-18	-6	3	-11	11	10	-34	-11	-4	25	-21	-7	-11	16	1
(%)	-5.3	-10.8	-34.6	-13.3	11.5	-28.9	64.7	111.1	-16.2	-13.9	-5.9	23.8	-18.3	-5.1	-7.4	15.7	5.0

-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0.4% 감소하였고, 인천(70.6%), 대전(54.5%), 제주(33.3%)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71.4%), 광주(-60.0%), 경기(-20.9%)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554	80	32	18	29	12	17	9	117	10	33	42	29	30	47	37	12
17년	618	75	32	16	17	30	11	11	148	35	39	43	32	38	43	39	9
증 감	-64	5	0	2	12	-18	6	-2	-31	-25	-6	-1	-3	-8	4	-2	3
(%)	-10.4	6.7	0.0	12.5	70.6	-60.0	54.5	-18.2	-20.9	-71.4	-15.4	-2.3	-9.4	-21.1	9.3	-5.1	33.3

□ 한편, '18년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통안전 점검* 이후 조치결과**도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 사망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가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공단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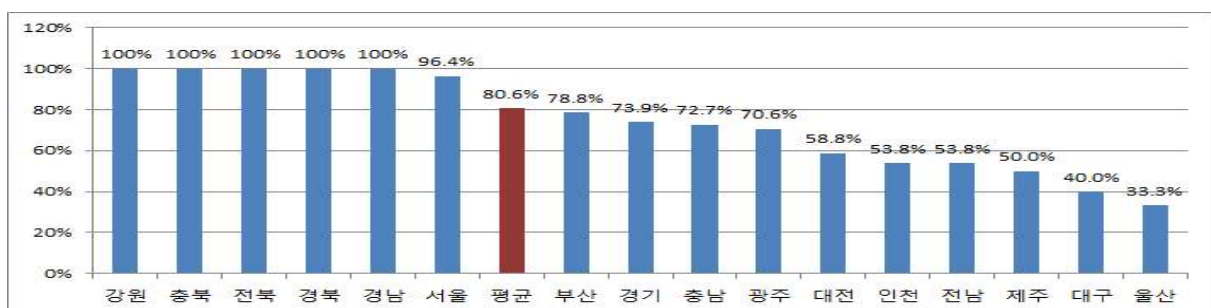
○ 점검을 실시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범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9월 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관리상태 불량 110건(29.6%),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44건(11.9%), 운전 적성정밀검사 미수검 15건(4.0%), 체험교육 미실시 10건(2.7%) 등

○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범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을 실시하였다.

* 교통안전점검시 지적 건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

※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범규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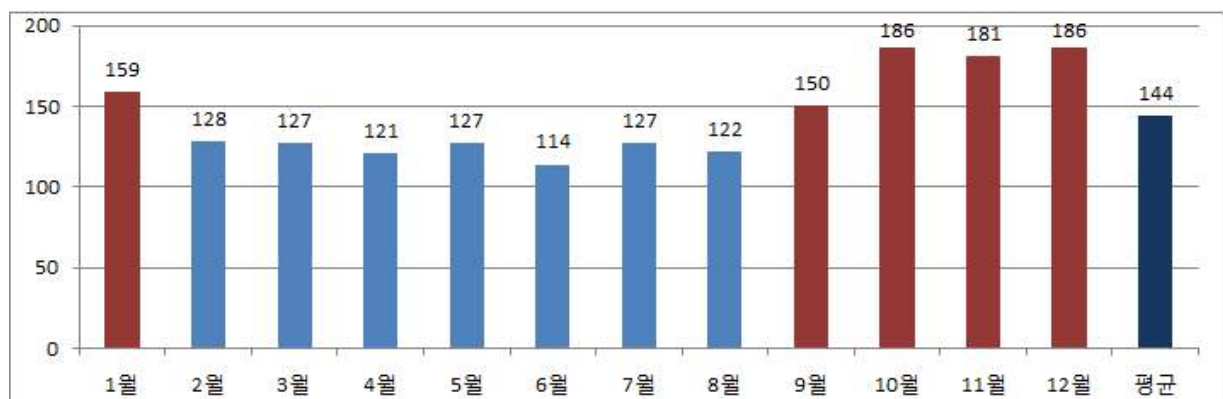
○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기간을 대비하여, 9월부터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경찰관 및 단속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행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월별 보행 사망자 현황(최근 3년 평균, 단위 : 명) >

참고

'18년도 상반기 교통수단안전점검결과 조치 현황

시도	점검 회사	법규 위반 건수 (A)	조치중 (B)	조치완료			처분율 (C/A)	과태료 부과율 [D/C]
				처분 건수 (C)	과태료 부과 건수(D)	주의 등 경미한 처분건수(E)		
계	236	371건	72건	299 건	234건	65건	80.6%	78.3%
서울	55	83	3	80	58	22	96.4%	72.5%
부산	19	33	7	26	22	4	78.8%	84.6%
대구	15	15	9	6	5	1	40.0%	83.3%
인천	5	13	6	7	5	2	53.8%	71.4%
광주	7	17	5	12	12		70.6%	100.0%
대전	8	17	7	10	8	2	58.8%	80.0%
울산	2	3	2	1	1		33.3%	100.0%
경기	64	88	23	65	53	12	73.9%	81.5%
강원	7	26		26	15	11	100.0%	57.7%
충북	7	8		8	7	1	100.0%	87.5%
충남	6	11	3	8	8		72.7%	100.0%
전북	6	18		18	10	8	100.0%	55.6%
전남	9	13	6	7	7		53.8%	100.0%
경북	9	8		8	7	1	100.0%	87.5%
경남	14	16		16	15	1	100.0%	93.8%
제주	3	2	1	1	1		50.0%	100.0%

* 세 종 18년 도 1-2분 기 점 검 대 상 회 사 없 음 (점 검 미 실 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유통 행위 집중 단속한다

- 해수부, 가을철 성어기 앞두고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하여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40종에 대해 금지채장·체중을 두고 제한

우선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 팀을 구성하여 219개 수협위원장, 도매시장, 횃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이와 함께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불법어업 방지 및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특별단속 추진

* 日/慘 : '18. 10.1~10.31 /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불법어업 및 어린물고기 포획·불법유통 등은 상존
 - 최근 5년간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위반행위 여전
 - *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 '13(88), '14(69), '15(66), '16(55), '17(68)
 - ** 체장·체중(꽃게 등 40개 어종)위반 : '13(122), '14(78), '15(95), '16(52), '17(75)
 - **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위반 : '13(118), '14(125), '15(141), '16(84), '17(121)

2

특별단속 계획

- 기 간 : '18.10.1 ~ 10.31
- 참 여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 대 상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수산자원 포획금지(체장·체중) 40개 어종을 대상으로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유통 행위
- (육상단속)
 - (편성) 특별사범경찰 주축으로 특사경 전담팀(3~4명) 구성
 - (운영) 지역별·어종별·업종별 대상선정 후 집중 육상단속 실시
 - 수협위원장(219개소), 수산물도매시장(횃집) 등 단속 및 지도제도 병행
 - * 중대 사안, 장기간 수사 필요한 사건은 관련기관간 협업 기획수사 추진
- (해상단속)
 - (편성·운영) 4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제주) 편성 및 각 활동해역 임무수행
 - (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및 어린물고기 포획 등
 - * 수산자원 포획금지(체장·체중) 40개 대상어종 중 어린물고기(치어)포획